현대사회와 다문화 2017 제7권 2호(88~116)

북한주민의 기본, 소득, 의료보장 욕구: 중국내 북한전문가의 시각을 원용하여

정병화* · 모춘흥** · 조병식***

요약_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과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을 통해 현재 북한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살펴본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북한주민의 식생활욕구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반면, 소득 욕구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주민은 의료보장 욕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생활보장 욕구에 있어서는 경제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의 북한주민의 욕구변화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_욕구조사, 북한주민, 탈북자, 중국내 북한전문가, 북한주민의 욕구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970). 또한 이 논문의 초고는 필자가 2017년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 『통일대비 복지욕구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2017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에 대해 건설적인 심사평을 주신 『현대사회와 다문화』의 익명의 논평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대진대학교, 정치학, wkaki@hanmail.net

** 한양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정치학, trichun@naver.com

*** 대진대학교, 박사수료, 정치학, 1tjr61@naver.com

1. 서론

브루킹스연구소 초대 한국석좌(Korea Chair) 캐서린 문 교수는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주변인으로 남아 있는 한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한바 있다. 이 말은 남북한 통일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3만 명의 탈북자[1]들이 남한 사회 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차별받고 주류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인 것이다(경향신문 2014/6/3).

이렇듯 탈북자가 남한 사회의 배제와 차별의 희생자가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은 통일한국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나아가 국내에 정착한 3만여 명의 탈북자의 800배에 달하는 2,500만 북한주민을 통일 이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의 문제는 통일한국의 안정적인 내적통합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모춘흥 2017: 44). 그러나 현재 실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실상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현재 북한의 변화상을 추적하고, 그 속에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장용석 외 2016; 이철수 외 2016a; 이철수 외 2016b).

또한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비동시성의 동시성(simultaneity of non-simultaneous)'의 문제[2]를 노정하고 있다. 즉 과거

1 탈북자의 법적 공식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들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탈북자를 법적으로 지칭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에서 '주민'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김성경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영토조항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국민' 혹은 '북조선 국민'이라는 명칭이 아닌 '주민'이라는 다소 애매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성경 2017: 3).

2 '비동시성의 동시성' 개념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생성되어 동시에 양립하기 어려운 전근대, 근대, 탈근대적 특징들이 다차원적 시간대에 공존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격렬한 분출"을 야기하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지적"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강정인 2014: 82-83, 이병하 2015: 245).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호(Ernst Bloch)는 1930년대 독일의 정치, 사회, 문화를 분석하는 가운데 같은 시간에 존재할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의 북한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를 한국 정부가 매년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3]. 물론 최근 들어 일부 연구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직접 면접조사 한 내용을 토대로 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강동완·박정란 2015). 이러한 연구에서 말하는 북한주민은 남한이나 중국 등 제3국으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식량구입 및 장사를 위해 북·중 국경을 반복해 넘나드는 사람들과 중국친지 방문을 위해 공식적으로 비자를 받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직접 면접조사방식의 연구는 현재 북한의 변화상과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북한주민의 통일의식과 북한주민이 생각하는 남한의 이미지, 그리고 김정은 시대 북한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에 반해 본 연구는 현재 북한주민의 욕구 수준과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당국의 감시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에 대한 면접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밝혀질 경우에 이들이 신변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학문적인 연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혹은 탈북자들과 많은 접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

수 없는 시간이 같은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Bloch,1935; Bloch and Ritter 임혁백 2015: 5에서 재인용).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은 한국사회를 분석하는 이론 틀로도 종종 사용돼 왔는데, 대표적으로 임혁백은 20세기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사용했다(임혁백 2014).

3 아울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중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북한주민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주민에 대한 욕구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 중인 북한주민 혹은 탈북자의 견해 또한 현재 북한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대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갖는 신뢰성의 문제는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결과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문조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국내 북한전문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북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공공기관 종사자이다. 둘째, 탈북자 조사 및 연구의 경험을 많이 해오고 있는 연구자이다. 셋째, 현재까지도 북한에 왕래하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혹은 탈북자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국내 북한전문가의 견해가 현재 북한 주민의 욕구를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일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의 대표성 및 신뢰성의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간접조사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내 북한전문가 30인을 통한 조사결과는 훨씬 많은 수의 북한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본 연구의 조사결과가 갖고 있는 신뢰성의 문제를 대표성의 문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탈북자가 과거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 현재의 북한을 평가 혹은 예견하는데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에서 본 연구는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라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개요

1) 응답자 분포의 특징

본 연구는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혹은 탈북자들과 많은 접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현재 북한주민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0인의 중국내 북한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성별을 변수로 하여 차이를 살펴보고자 남성과 여성을 50%:50%의 비율로 선정했다. 전체 연령대별 구성은 40대가 46.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3.3%, 50대 20% 순으로 30-50대가 주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7년 6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했으며, 조사 참여자들에게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조사결과를 통계 목적 외의 사용 금지와 비밀보장 원칙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으며, 모든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했다.

본 조사에 응답한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의 교육수준은 대학원이 5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학 33.3%, 전문학교 16.7%가 그 다음의 비율

표 1. 성별 분포

	빈도	비율(%)
남자	15	50
여자	15	50
전체	30	100

표 2. 연령별 분포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빈도	1	7	14	6	1	30
비율(%)	3.3	28.3	46.7	20.0	3.3	100

표 3. 교육수준

	빈도	비율(%)
대학원	15	50
대학	10	33
전문학교	5	16.7
전체	30	100

을 차지했다. 이렇듯 본 연구에 응답한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의 교육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중국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본 조사에 응답한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들을 통한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특히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2) 탈북 동기

본 조사에 응답한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이 그동안 접했던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는 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이 만나본 탈북자들의 경제수준은 매우 열악했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 응답한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이 만나본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의 경제수준은 '하'가 56.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 33.3%, '상' 6.7%, '무응답' 3.3%가 그 다음의 비율을 차지했다. 탈북자들의 경제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통해 이들이 탈북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북한 경제가 수십 년에 걸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전반적 경제상황이나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4] 이는

4 2015년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 대미 관계, 핵 외교, 그리고 내부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북한의 산업과 농업

표 4. 경제수준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상	2	6.7
중	10	33.3
하	17	56.7
전체	30	100

북한 당국의 노력보다는 시장화의 진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일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러한 정도는 계층과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전히 일반 주민들의 경제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문제'가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탈북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탈북 시 누구와 함께 동반했는가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0인 중 18인은 본인이 만나본 탈북자 중 60%가 탈북 시 동반 탈북자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점은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이 만나본 탈북자 중에서 배우자(13.3%), 부모(13.3%), 자녀(20%)와 함께 동반 탈북한 사람의 비율이 생각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그나마도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은 형제자매(33.3%), 친구(16.7%)와 동반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배우자, 부모, 자녀와 함께 탈북을 한 사람보다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탈북동기에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주기 위한 '이민형' 혹은 '유학형' 탈북이 점차 증가추세인 것과는 달리,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이 만나본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 중인 탈북자의 경우에는 자녀 혹은 배우자와 함께 탈북을 하는 경향이 생각보다 높지 않

에 시장 원리를 적용한 개혁 조치들이 북한 경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도시에는 관리자들이 봉급을 정하고 고용과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농촌에서는 농부들이 수확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생산 인센티브를 늘리는 등의 개혁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Chanlett-Avery et al. 2015: 3).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돈을 벌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3. 조사 결과

1) 기본욕구

본 조사에서는 식생활과 관련된 기본욕구에 대해 2가지 조사문항을 통해 현재 북한주민의 식생활에 관한 기본 욕구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물론 2가지 조사문항만으로 현재 북한주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욕구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간접조사방식으로 너무 구체적인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 자칫 왜곡된 조사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부득이하게 북한주민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조사취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의 기본적 식생활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4인 가족이 충분히 먹는데 일주일에 평균 얼마의 식량(kg)이 필요하냐고 질의한 결과, 30인의 평균값으로 8.37kg이 나왔다. 일주일 평균 얼마의 식량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5kg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7kg과 10kg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5명이었다. 3kg과 4kg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명과 2명이었으며, 13kg, 15kg, 16kg, 20kg, 28kg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모두 1명씩이었다.

kg별 응답의 빈도수를 구간별로 구분하면 6−10kg 구간의 응답률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0−5kg 구간의 응답률이 40%로 나타났다. 반면 11−20kg 구간의 응답률은 13.3%로 나타났으며, 21−40kg의 응답률은 3.3%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현재 북한주민의 기본적 식생활 욕구가 그렇게 높지 않

표 5. 식생활-일주일 식량

Kg	빈도	Kg	빈도	Kg	빈도
3	1	7	5	16	1
4	2	10	5	20	1
5	9	13	1	28	1
6	3	15	1		

표 6. 식생활-일주일 식량

구간 범위	빈도	비율(%)
0-5kg	12	40.0
6-10kg	13	43.3
11-20kg	4	13.3
21-40kg	1	3.3
총계	30	100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결과가 현재 북한의 4인 가족의 일주일 식량 필요분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주민의 기본적 식생활 욕구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은 이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수혜받기를 기대하는 식량의 양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주민의 기본적 식생활 욕구가 높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조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소득욕구

본 조사에서는 소득 욕구와 관련해서 9가지의 범주의 14개의 조사문항을 통해 북한주민의 소득과 관련된 욕구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소득 욕구와 관련해서 조사한 9가지 항목은 근로시간, 일자리제공, 초과근무, 직업교육, 근로시 자녀, 사회보장비 징수,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월급, 연금 가입 및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부분이다. 또한 근로시간, 직업교육, 월평균 생활비, 월평균 월급, 연금 가입

및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해당 항목을 다시금 두 부분의 세분화하여 조사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

본 조사는 북한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 근로자가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일하기를 원하는가를 질의한 결과, 30인의 평균값으로 7.9시간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8시간을 일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90%로 절대다수의 응답을 차지했으며, 6시간과 10시간을 일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각각 6.7%와 3.3%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한 근로기준법을 통합하는 것이 생각보다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행 남한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1일 휴게 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북한 근로자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남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표 7. 근로시간

근로시간	빈도	비율(%)
6	2	6.7
8	27	90
10	1	3.3
전체	30	100

표 8. 8시간 노동시간 준수 여부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17	56.7
약간 동의할 것이다	2	6.7
보통이다	10	33.3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	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0
전체	30	100

북한 근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질의한 결과, 응답자 30인 중 17인이 매우 동의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인에 불과했다.

이상의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 이후 남북한 근로기준법 통합이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현행 남한의 근로기준법에서 '8시간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남한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따라서 '8시간 초과근무' 제한기준에 북한 근로자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은 여전히 북한 근로자의 노동 강도가 남한 근로자의 노동 강도와 비교할 때 높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답변일 수 있다.

(2) 일자리 제공

국가가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한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중 21명이 매우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약간 동의할 것이다가 5명으로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북한주민들 상당수가 국가로부터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특히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북한주민은 한편으로 그들이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를 장마당을 통해서 얻고 있지만, 본 조사를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 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만으로도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싶은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얻게 된 소득 중 상당 부분은 뇌물과 부수입의 형태로 권력을 가진 소수의 특권층에게 강하게 이전되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상당수 북한주민들은 직접적인 불만을 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내심 불만과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분별한 시장의 확대에 대해 당국의 통제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은 언제든지 급감할

표 9. 일자리제공(국가가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21	70
약간 동의할 것이다	5	16.7
보통이다	3	10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	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0
전체	30	100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조사결과는 북한의 시장화와 내부적인 비리 및 부정부패 문제를 바라보는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 초과근무

더 많은 노임을 받기 위해 야근 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보통이다가 11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매우 동의할 것이다가 10명, 약간 동의할 것이다가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북한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직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만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에 더해 장마당 등의 또 다른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존을 위해 기업에 출근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마당 등의 또 다른 사경제 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북한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노임을 얻기 위해서는 연장근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인 것이다.

이렇게 초과근무에 대한 북한근로자들의 응답률이 높다는 사실은 북한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사회주의 노동 강도에 익숙한 결과 자본주의 노동 강도에 적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북한근로자들이 더 많은 노임을 벌기 위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통일 이후 남북한 노동 분야의 통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초과근무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10	33.3
약간 동의할 것이다	8	26.7
보통이다	11	36.7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	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0
전체	30	100

(4) 직업교육

본 조사는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질의를 했다. 먼저 북한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 30인 중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가 15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약간 필요하다가 10명, 보통이다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현재 거의 대다수 북한근로자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 혹은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현재 자신들의 직장에서 받는 노임(생활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가는 것과 별개로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다음으로 실제 북한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인 중 약간 그렇다가 9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매우 그렇다 7명, 보통이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가 각각 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은 2명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에는 참여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직업교육 필요성

	빈도	비율(%)
매우 필요하다	15	50
약간 필요하다	10	33.3
보통이다	5	16.7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3.3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전체	30	100

표 12. 직업교육 참여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7	23.3
약간 그렇다	9	30
보통이다	6	20
별로 그렇지 않다	6	20
전혀 그렇지 않다	2	6.7
전체	30	100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 혹은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의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오랜 기간 북한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 거의 대부분의 생활비를 장마당을 통해서 얻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북한근로자들은 직장 혹은 국가로부터 얻게 되는 생활비(노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근로시 (미취학) 자녀 보육문제

북한근로자가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경제활동을 위해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보육시설(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낸다는 응답이 23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맡긴다 5명, 일을 그만 두고 직접 돌본다와 무응답이 각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표 13. 근로시 자녀의 보육문제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보육시설(탁아소, 어린이집, 유치원 등)	23	76.7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맡긴다	5	16.7
일을 그만두고 직접 돌본다	1	3.3
전체	30	100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보육서비스에서 사적 전달체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보육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의 보육서비스에서 사적 전달체계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계층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의 시장화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별, 지역별 차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 점에서는 교육 및 양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6) 사회보장비 징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월 노임(생활비)에서 사회보장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북한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매우 동의할 것이다와 약간 동의할 것이다가 각각 7명, 무응답이 1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1/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사회보장비 징수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한 이유는 북한당국에 대한 북한근로자의 신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편으로 북한근로자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월 노임(생활비)에서 사회보장비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장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혜택을 받지 못

표 14. 사회보장비 징수

	빈도	비율(%)
무응답	1	3.3
매우 동의할 것이다	7	23.3
약간 동의할 것이다	7	23.3
보통이다	5	16.7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	3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0
전체	30	100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월평균 생활비

본 조사는 북한근로자가 월평균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4인 기준 한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하냐고 질의한 결과, 30인의 평균값으로 565달러가 나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생활비가 300달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200달러와 400달러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5명, 500달러라고 응답한 사람이 4명, 100달러와 550달러라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달러별 응답의 빈도수를 구간별로 구분하면 100-500달러 미만의 구간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1000달러 미만의 구간의 응답률은 23.3%로 나타났으며, 1000-2000달러 미만의 구간과 2000달러 이상은 각각 6.7%와 3.3%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실제 이들이 직장에서 받는 노임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일례로 2015년 기준으로 개성공단의 평균임금이 141.4달러이며, 이 가운데 40% 내외를 떼고 60%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생활비는 결코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월평균 생활비가 생각

표 15. 월평균 생활비

	빈도	비율(%)
$100	2	6.7
$200	5	16.7
$250	1	3.3
$300	6	20
$400	5	16.7
$450	1	3.3
$500	4	13.3
$550	2	6.7
$800	1	3.3
$1500	1	3.3
$1600	1	3.3
$2000	1	3.3
전체	30	100

표 16. 월평균 생활비 – 범위

구간 범위	빈도	비율(%)
$500 미만	20	66.7
$500–1000 미만	7	23.3
$1000–2000 미만	2	6.7
$2000 이상	1	3.3
총계	30	100

보다 높은 이유는 이들이 장마당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부수입이 직장에서 받는 노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상당수 북한근로자들은 형식적으로 직장에 출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마당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8) 월평균 월급

본 조사는 북한근로자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산다면 직장에서 월평균 얼마의 노임을 받는 것이 적정한가를 조사한 결과, 30인의 평균값으로 508달러가

나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300달러를 노임으로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500달러가 5명, 600달러가 3명, 200달러와 400달러가 각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달러별 응답의 빈도수를 구간별로 구분하면 100-500달러 미만의 구간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0-1000달러 미만의 구간이 26.7%, 100달러 미만이 6.7%로 나타났으며, 1000-1500달러 미만의 구간과 1500-2000달러 미만의 구간, 그리고 2000달러 이상은 각각 3.3%에 불과했다.

북한근로자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산다고 할 때 월평균 월급으로 508달러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 답변은 이 질문 바로 전에 북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받고 있는 노임보다 통일 이후 훨씬 높은 수준의 월급을 원하는 이유는 이들이 현재 장마당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북한근로자가 통일 이후 북한에 거주하다고 할 때 월평균 월급으로 508달러를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답변에는 현재 이들이 직장에서 받고 있는 노임과 장

표 17. 월평균 월급

	빈도	비율(%)
$50	2	6.7
$150	1	3.3
$200	2	6.7
$250	1	3.3
$300	10	33.3
$330	1	3.3
$400	2	6.7
$500	5	16.7
$600	3	10
$1200	1	3.3
$1700	1	3.3
$3000	1	3.3
전체	30	100

표 18. 월평균 월급 – 범위

구간 범위	빈도	비율(%)
$100 미만	2	6.7
$100–$500 미만	17	56.7
$500–$1000 미만	8	26.7
$1000–$1500 미만	1	3.3
$1500–$2000 미만	1	3.3
$2000 이상	1	3.3
총계	30	100

마당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부수입, 여기에 통일 이후 북한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9) 연금 가입 및 국가 기초생계보장

본 조사는 노년기를 대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북한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매우 동의할 것이다가 9명, 약간 동의할 것이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가 각각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금 가입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과 매우 동의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1/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노년기를 대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한 이유는 현재 북한주민이 북한당국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응답자 30명 중 9명이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동의한 이유는 이들이 북한당국으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국가가 실직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북한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매우 동의할 것이라는 응답이 24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약간 동의할 것이다가 4명, 보통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가 각각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표 19. 연금 가입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9	30
약간 동의할 것이다	4	13.3
보통이다	3	10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	3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4	13.3
전체	30	100

표 20. 국가 기초생계보장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24	80
약간 동의할 것이다	4	13.3
보통이다	1	3.3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0	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	0
전체	30	100

조사 결과는 현재 북한근로자들이 실직당할 경우에 당국과 직장으로부터 기초생계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에 대한 불만 혹은 아쉬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의료보장 욕구

본 조사에서는 3개의 조사문항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료보장 욕구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 의료보장 욕구와 관련해서 조사한 3개의 조사문항은 의료비용 부담, 치매환자 요양, 국가 의료보험 가입과 관련된 문제이다.

(1) 의료비용 부담

현재 북한주민은 국가의료보험에 대해 매우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내용은 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특

표 21. 의료비용 부담

	빈도	비율(%)
국가가 모두 부담	16	53.3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다만 국가가 더 많이 부담)	14	46.7
개인이 모두 부담	0	0
전체	30	100

히 본 조사에서는 국가의료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북한근로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용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해 조사했다. 이 물음에 응답자 30명 중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이 의료비용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2) 치매환자 요양

북한근로자의 가족구성원 중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치매환자를 어떻게 요양하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응답자 30명 중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본다는 응답이 12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가족이 직접 집에서 돌본다가 11명,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본다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도 치매환자의 요양과 관련해서 요양전문시설과 간병인의 역할이 남한만큼은 아닐지라도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간접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치매환자 요양

	빈도	비율(%)
가족이 집에서 돌본다	11	36.7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돌본다	6	20
요양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돌본다	12	40
기타	1	3.3
전체	30	100

(3) 국가 의료보험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북한근로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명 중 매우 동의할 것이라는 응답이 11명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명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약간 동의할 것이다가 4명, 보통이다가 3명,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 의료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전체 응답자의 2/5에 해당하는 12명이 국가 의료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현재 상당수 북한주민이 북한당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3. 국가 의료보험

	빈도	비율(%)
매우 동의할 것이다	11	36.7
약간 동의할 것이다	4	13.3
보통이다	3	10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10	33.3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	6.7
전체	30	100

4) 생활보장 욕구

본 조사에서는 2개의 조사문항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보장 욕구를 조사하였다. 다만 생활보장 욕구와 관련해서 조사한 2개의 조사문항은 구조화된 문항이 아닌 응답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 생활보장 필요 요소

통일 이후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북한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질문은 구조화된 문항이 아닌 응답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가장 대표적인 생활보장 필요 요소

로 제기된 견해로는 경제원조 및 지원, 일자리, 최저생활비 지급, 기초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 무차별, 보육시설확충,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 높은 수준의 월급,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 안정된 직장, 안정된 소득, 의식주 해결, 문화교육 등이 있었다.

본 조사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 북한주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 경제, 일자리,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다만 소수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2) 북한지역 거주를 위한 인센티브

통일 이후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북한지역에 계속 거주하는데 어떠한 인센티브가 가장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 역시 구조화된 문항이 아닌 응답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북한주민의 북한지역 잔류를 유도하는데 거론된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경제적 지원, 거주환경개선, 남한과 비슷한 급여 지급, 상권 보장, 대외개방, 교통수단 개선, 남한과 비슷한 급여 및 평등한 경제기준, 남한기업의 북한 투자, 무상급식, 무상의료, 민주화, 식량, 의식주, 인권, 일국양제 등이 제기됐다.

본 조사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북한지역 잔류를 유도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제기된 인센티브에서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생활보장 필요 요소와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북한지역 잔류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가 일자리, 경제적 지원이라는데 대다수 견해를 같이했다. 또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이 북한주민의 북한지역 잔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했다.

4. 결론: 연구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현재 북한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욕구를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혹은 북한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에 대한 간접조사방식을 통해서 살펴봤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식생활 욕구는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 4인 기준 가족이 충분히 먹는데 일주일에 8.37kg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수치는 국내조사에서 현재 북한주민 4인 기준 한 가족이 충분히 먹는데 일주일에 14.2kg을 원하는 것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이다.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 이후 북한주민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란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적은 수치가 나온 것은 북한주민이 북한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배급을 거의 사실상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주민의 소득 욕구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북한근로자는 평균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길 원하며, 보다 흥미로운 점은 더 많은 노임(생활비)을 벌기 위해서 초과근무도 마다하지 않으며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직업교육이나 재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다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보장비 징수와 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비 징수와 연금가입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 점은 북한당국에 대한 북한근로자의 신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의료보장 욕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용 부담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지만, 국가 의료보험 가입에 대한 응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는데, 이 점은 북한당국에 대한 북한근로자의 신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치매환자의 요양에 있어서는 남한만큼은 아닐지라도 요양전문시설과 간병인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생활보장 욕구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부분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북한주민에게 필요한 것과 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북한지역에 잔류시키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로 중요한 것이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의 조사 결과가 갖고 있는 학문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과 북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혹은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북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는 최근까지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혹은 북한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내 북한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확인해보고 북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북한 연구가 갖고 있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의 문제를 일정 부분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그동안 탈북자 설문 혹은 심층면접에 기초한 조사가 북한의 변화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의 정착실태에 치우친 결과, 실제 북한주민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일부 북한 전문가와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는 최근의 북한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가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남한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남한의 대북한 (인도적)지원과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등 제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복지적인 요구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는 바로 이러한 남한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공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는 국내 최초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본 조사의 연구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결과는 남한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신: 정병화(대진대학교 정치학 조교수)(wkaki@hanmail.net, 전화: 031-539-2165)
Correspondence: Chung, ByungHwa(assistant professor, political science, DaeJin University)
(wkaki@hanmail.net, phone: 031-539-2165)

2017.11.07 접수, 2017.11.28 수정, 2017.12.05 게재확정

참고문헌

강동완·박정란, 2015,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너나드리.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아카넷.
김성경, 2017,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교환'을 넘어선 윤리적 관계의 모색, 한국언론학회 2017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김성경, 2016,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방법으로서의 마음: 생활총화와 검열의 상황에서의 공모하는 마음, 경제와사회, 109, 153-190.
모춘흥, 2017, 북한주민과의 공생, 그 (불)가능성: 북한의 열악한 복지현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년 춘계학술회의 발표문.
이병하, 2015, 비동시성의 동시성, 시간의 다중성, 그리고 한국정치, 국제정치논총, 55(4), 241-273.
이철수 외, 2016,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북한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수 외, 2016,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 과도기 이중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혁백, 2014, 비동시성의 동시성: 한극 근대정치의 다중적 시간, 고려대학교출판부.

임혁백, 2015, 한국 근대정치의 인문학적 읽기: [비동시성의 동시성]에 인용된 문학작품의 해석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4(2), 153-201.

장용석 외, 2016, 북한사회변동 2015: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Chanlett-Avery, E. Rinehart, I. E., Nikitin, M. B. D., & Park, S., 2015, 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 CRS REPORT.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경향신문, 2014.6.3, 한국, 탈북민들 지위 높여야 통일에 도움 돼.

The Needs of Basics, Income, and Medical Security of North Koreans through the Standpoints of China's North Korea Specialists

Chung, ByungHwa* · Mo, ChunHeung** · Cho, ByeonhSik***

Abstract_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s of basics, income, and medical security of North Koreans through the Specialists on North Korean in China who have got in touch with North Korean Citizens who have resided or are residing in China, or North Korean defectors. Furthermore, this study categorizes the welfare needs into four areas, namely basic living, labor, income security and healthcare needs and excludes respondents' personal information.

First,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illustrates that for basic living needs, North Koreans show very high desire for food, housing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 Secondly, in terms of labor needs, the people are receptive to not only eight hours of work but also working extra hours. Thirdly, regarding income security, they expect higher income in the unified Korean society but not as high as the income level of South Korea. Lastly, with respect to healthcare needs, North Koreans strongly show the desir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ighly prefer to pay more taxes for better medical services.

These findings have academic and policy meanings in that the author traced North Koreans' shift of the lust of these days, and through it, the writer serve them as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plan for South Korea'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f two Koreas. Together, this study seek its meaning in that it identified the needs of basics, income, and medical security of North Korean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 DaeJi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olitical Science, wkaki@hanmail.net

** Hanyang Peace Institute, Research professor, Political Science, trichun@naver.com

*** DaeJin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1tjr61@naver.com

Keywords_Needs Assessments, North Koreans, North Korean Defectors,
China's North Korea Specialists, the Needs of North Koreans